



올 하반기 돼지가격 안정대책 적극 추진

- 농림부, 본회 등과 수출부위 소비촉진 TV광고 추진 검토

올 하반기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본회와 농림부 등 공동으로 돼지고기 수출부위 소비촉진을 위한 TV 광고가 제작·방영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지난 8일 생산자 단체 및 유통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하반기 돼지고기 수급전망 및 가격안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하반기 돼지가격 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올 하반기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본회와 농협 공동으로 수출부위 소비확대를 위한 TV 광고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돼지고기의 영양학적 우수성과 장수마을 식습관 등 TV 다큐멘터리 및 기획프로그램 제작·방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육시설 50㎡이상 양돈농가 '05년까지 등록해야

- 농림부, 축산업등록제 시행방안 마련

2005년까지 사육규모 50㎡이상 즉, 50두 규모 이상의 양돈농가의 경우 축산업에 등록해야 한다. 농림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축산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금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축산업등록제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6월 24일 밝혔다. 이 시행방안에 따르면, 돼지의 경우 2004년에 500㎡(500두) 이상, 2005년에 50㎡(50두) 이상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등록대상 농가수는 양돈농가 전체 59%인 1만호가 이에 해당된다. 등록시에는 축사소독시설장비,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일정한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등록 후에는 과도한 밀집사육 억제를 위한 가축 두당 최소 축사면적 확보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2년 이상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농림부는 등록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등록한 축산농가에 대해

서는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농가당 5천만원 한도내에서 융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고 밝혔다.

“양돈업 2005년까지 전 두수 등록해야”

- 본회 김동환 부회장 '등록제 공청회'서 이같이 주장

“2005년까지 양돈업 전 두수는 축산업에 등록해야 한다” 본회 김동환 부회장은 지난 6월 25일 농협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된 ‘축산업 등록제 관련 공청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동환 부회장은 “농림부 안대로 등록대상을 50두 이상으로 할 경우 만약 50두 이하 농가에서 질병이 발생한다면 양돈업계 전체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며, “1차로 2004년까지 50두 이상 농가에 대해 등록을 실시하고, 2차로 2005년까지 전 두수를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사산, 돼지콜레라 백신 유효증이 아닌 ‘뇌심염’

- 농림부, 검역원 등 전문기관 병성 감정 결과서 밝혀

농림부는 지난 6월 20일 최근 다수의 양돈 농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임신돈 유·사산 발생과 관련, “뇌심근염 또는 파보바이러스 등 유·사산과 관련 있는 질병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유·사산 발생으로 신고된 총 27건 돼지에 대한 수의과학검역원 등 전문기관의 병성감정 결과, “돼지콜레라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며, “검사가 완료된 23건 중 뇌심근염 7건, 뇌심근염·파보 14건, 원인 미상 2건 등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혀, “뇌심근염·파보 등의 질병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또한, 농림부는 “돼지콜레라 예방약이 문제가 있다면 예방접종 직후 일시에 전국적으로 나타나야 하고, 예방약에 병원성이 있다면 접종 받은 모든, 비육도, 육성돈 등 모든 돼지는 그 자체가 폐사되거나 돼지콜레라에 감염증상을 나타나야 한다”며 “예방접종에 따른 부작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농업연수생 510명 8월 초순 농가 인계”

- 농협 외국인농업협력단, 경기도 등 188농가에

최근 서울, 경기, 강원 등 일부 도 외국인농업연수생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이 완료함에 따라, 사증발급 약 1개월과 교육과정 15일이 지난 후 해당농가에 인계될 것으로 보인다. 농협중앙회 외국인농업협력단은 최근 본회가 외국인농업연수생이 해당농가에 빠른 시일내 배정될 수 있도록 요청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혀왔다.

외국인농업협력단은 “상대국가의 사정, 사증 절차 등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연수생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며 “연수생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농림부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연수생 도입일정에 대해 “서울 경기, 강원, 충남·북, 제주지역 188농가 510명의 연수생은 6월 18일까지 8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했다”

며, 사증발급 약 1개월과 교육과정 15일 이상을 거쳐 연수생을 농가에 인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남·북, 경남·북 지역 118농가 322명의 연수생에 대해서는 지난달 24~25일 작성한 위임장 등 사증발급신청서의 발급신청서류를 확인중이라며, 해당 국가 송출기관에 연수희망자 명단제출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전국적 돼지콜레라 발생 불구 돼지 사육두수 소폭 증가

- 6월 1일 현재 905만1천두 전분기 보다 0.3% 증가

올 전국적인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10만여두가 살처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돼지 사육두수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표한 '03년 6월 가축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1일 현재 돼지 사육두수는 905만1천두로 전분기 902만7천두에 비해 0.3%(2만4천두), 전년 동기 보다 3.0%(26만두) 각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모돈 두수도 98만5천두로 전분기 보다 0.1% (1천두), 전년 동기보다 2.8%(2만7천두)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통계자료 참조>

"축산분뇨 악취 규제 강화된다"

- 환경부, 악취방지법 제정 추진

올 4월 국회에 제출돼 계류중인 악취방지법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될 것으로 보여 축산농가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

기 위해 현재 대기환경보전법과는 별도로 악취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악취방지법은 시·도지사가 필요한 지역을 악취 규제지역으로 지정·중점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악취발생원에 대한 엄격한 규제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규제대상 악취물질의 종류를 현행 8개에서 22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악취배출 시설 범위와 허용기준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축산사업장에 대해서는 이행 및 개선 조치가 내려지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악취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돼지도체 등급기준 도체중·등지방두께 상향 추진

- 등급판정소, '돼지도체 등급판정기준' 개정

돼지도체 등급판정에 따른 중량과 등지방두께 기준이 윗하반기부터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등급판정소(소장 정동홍)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돼지도체 등급판정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박피 도체의 경우 중량과 등지방두께를 등급별로 각각 2kg과 2mm씩 상향·조정키로 하고,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계등급판정방법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한, 냉도체 육질등급판정방법을 추가하여 등심과 목심을 절개하여 목심단면의 근내지방도, 육색, 조직감, 수분삼출도, 근육분리도에 따라

육질등급을 4개(1+, 1, 2, 3)로 세분화했다.

소규모 축산퇴비 생산농가 비료생 산업 등록 제외

- 정부, 비료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공포·시행
앞으로 소규모 축산퇴비를 생산하는 농가
는 비료생산업 등록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지난 6월 25일 이 같은 내용의 비료
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을 공포하고,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등으로 제조된
부산물비료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
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비료생산업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축산분뇨를 이용하여 1일 평균 1.5
톤 이하의 부산물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본회 김건태 회장 등 임
원들은 지난 2월 17일 국회 소위원회 위원들
을 방문, 동 법 개정에 대한 부당성을 설명하
고, 축산분뇨는 동 법 개정을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돼지콜레라 살처분농가 가축 재입 식비 선지급

- 농림부, 본회 요청 받아들여 '농가지원지침'
변경

지난 3~4월 전국적인 돼지콜레라 발생과
관련, 이동제한지역내 살처분 농가의 후보돈
등 가축재입식자금이 선 지급된다.

농림부는 지난 6월 18일 돼지콜레라 살처분
농가의 가축재입식비를 선지급하여 농가의 경

영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돼지콜레라 발생
이동제한지역내 농가지원지침'을 이같이 변경,
적극 지원키로 했다. 본회는 지난 6월 13일
을 3~4월 전국적인 돼지콜레라 발생과 관련,
살처분 농가의 조기 농장경영 정상화를 위해
후보돈 등 가축재입식자금을 선 지급해 줄 것
을 농림부에 건의했다.

축산물 안전성 확보 위해 잔류물 질 검사 강화

- 검역원, '축산관련 단체장 간담회'서 밝혀

앞으로 돼지고기 등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잔류물질검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박종명)은 지난
15일 검역원 대회의실에서 축산관련 단체장을
초청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문제
시되고 있는 항생제 범벅 소·돼지고기 유통
과 관련해 잔류물질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종명 검역원 원장과 축산관련단체협
의회 김건태 회장(본회 회장) 등 21개 축산관
련 단체장들은 최근 항생제 잔류문제와 돼지
콜레라 백신접종 중단, 칠레산 돼지고기 다이
옥신 검출, 복지부 가공업무 일원화 재추진 등
축산 당면현안에 대한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종돈장 거래기록 보존 의무화

- 농림부, 종돈장방역관리요령(안) 마련

앞으로 종돈장 사육돼지 소유자 등은 가축
의 거래기록을 작성하거나, 이를 1년간 보존
해야 하는 등 종돈장 방역관리가 강화된다.

농림부는 지난달 6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종돈장방역관리요령(안)을 마련, 고시한 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종돈장 및 정액등처리업체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의 경우 번식돈군은 반기별 1회 이상, 후보모돈 등은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가축전염병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종돈장 사육돼지 소유자 등은 가축의 거래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1년간 보존토록 하고, 가축방역관이 이에 대한 열람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종돈장 사육돼지 소유자 등과 가축운송업자는 돼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가장 최근의 검사증명서 사본을 휴대하도록 했다.

“농가경영회생 프로그램 제도화 필요”

- 박성재 연구위원 ‘농가부채 진단과 중장기 대응방향 토론회’ 서

박성재 농경연 연구위원은 지난 7월 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농가부채문제 진단과 중장기 대응방향 정책 토론회’에서 “모든 부채농가를 대상으로 이자율을 낮추고,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며, “농가부채대책을 부채 상환능력을 상실한 농가를 대상으로 부채구조 및 재무구조를 재조정하는 농가 회생 지원정책으로의 목표설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부채농가의 재무구조를 평가해 회생가능 농가의 경우 자산을 매각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에 상응한 이자율 인하와 상환기간 연장, 원금감면 조치 등

을 시행토록하는 한편, 회생이 어려운 농가의 경우 경영이양직불제 지원규모 수준에서 부채원금의 일부를 탕감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고 농지 자산을 농업자산관리기금이 매입 토록해 부실농가 스스로 퇴출을 선택토록 하는 방식 등의 경영회생 프로그램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농림부 조직개편... 농축산물 안전성 강화

최근 농림부는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농업·농촌·농정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일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농림부는 우선 최근 농축산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우리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보호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농산물유통국에 소비안전과를 신설했다. 또한, 친환경 농업육성을 체계화하기 위해 친환경농업과를 친환경농업정책과로 개편하는 한편, 홍보조직을 보강하여 농업·농촌에 대한 공익적 기능, 농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기능을 강화했다.

김영진 농림부장관 사표 수리돼

- 새만금 간척사업 관련, 항의 의사 표시로 사표 제출

최근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 지난 7월 16일 김영진 농림부 장관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한 것과 관련, 청와대는 지난 18일 김 농림부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김 장관은 지난 16일 오전 농림부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이 환경단체

등의 주장만을 근거로 13년 넘게 1조4천여억 원이 투입된 국책사업인 새만금 공사를 중단 시킨 데 항의한다”며, “고건 총리를 통해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진 농림부 장관은 국회에서 15년간 줄곧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만 활동해 온 자타가 공인하는 농축산업 전문가로 올해 2월 노무현 정부 초대 내각의 농림부 장관으로 기용됐다.

환경부, '가축분뇨 등 축산폐수 제도개선 협의회' 구성

환경부는 지난 7월 1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절한 관리와 국민들의 민원해소 등을 위해 관련 전문가, 업체 및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제도개선 협의회'를 올 하반기에 구성·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체계의 획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일반국민과 관련업체의 반복적인 민원에 대해 심사·분석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피드백 기능을 하는 등 광범위한 분야를 다룰 수 있는 심의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제주산 돼지고기 9월말 일본 수출 재개 추진

제주산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이 빠르면 9월 말께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지난 6월 30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제주산 돼지고기가 빠르면 9월 말 일본에 다시 수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고 밝혔다.

이날 우 지사는 지난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일본을 방문, 일본 농림성 대신 쿠마가이 이치오 정무관과 외무성 아즈미 치히로 심의관을 만나고, 이들로부터 수입조건이 충족되는 대로 수입 재개를 위해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PED 발생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

- 5월 현재 누계 55건 16,409두 발생

지난 5월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발생이 전월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으나,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발표한 5월 가축전염병발생월보에 따르면, 5월 중 돼지유행성설사병은 충남에서 2건 360두가 발생, 전월 9건 2,110두에 비해 크게 감소한 반면, 전년 같은 기간 2건 39두에 비해서는 여전히 발생두수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5월 현재 돼지유행성설사병 발생두수는 55건 16,409두로 전년 동기 누계 26건 5,693두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하는 등 크게 늘어났다.

축산분뇨 관련 농가 진단프로그램 개발 추진

- 환경부, 축산분뇨 관리종합대책(안) 마련

앞으로 축산분뇨의 효율적인 관리와 자원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축산농가 진단프로그램이 개발, 전국에 보급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 6월 18일 환경부 회의실에서 '축산분뇨 관리종합대책 추진방안 협의를 위

한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축산분뇨 관리종합대책(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축산농가의 가축사육 현황 및 농가별 친환경적 분뇨처리방향 제시, 공공처리 대상 및 물량 산정 등을 통해 축산농가 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축산비료 유통 활성화, 운영중인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및 개선 등을 통해 축산분뇨 공공처리 기능을 확대·추진"키로 했다.

HACCP 지정업소 156개소로 늘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박종명)은 지난 15일 식육가공장인 제주축산(주)과 (주)미트뱅크 등 3개소에 대해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격 업소로 지정했다.

이로서 7월 15일 현재 HACCP 인증업체는 도축장 84개소, 식육가공장 43개소, 유가공장 29개소 등 모두 156개소로 늘어났다.

HACCP 미적용 도축장 관리 대폭 강화

- 농림부, 'HACCP 시행 세부 실태조사지침' 마련

농림부는 지난 8월 7월 1일부터 도축장에 HACCP가 의무 적용됨에 따라 '도축장 HACCP 운용여부 실태조사지침'을 마련, 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지침에 따르면, '03년 7월 1일 기준 검역원으로부터 HACCP 적용 도축장으로 지정을 받은 83개소 이외의 79개 도축장을 대상으로 본 지침이 적용된다.

주요 실태조사항목은 도축장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지 여부, 도축업자가 자체위생관리 기준(ssop)을 작성·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등으로 이러한 기준 미작성이나 미운용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조치 등이 처해진다.

HACCP 적용작업장, 미생물검사 기록 의무화

- 농림부,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고시

농림부는 지난 7월 14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개정·고시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HACCP 적용 작업장의 영업자는 도체식육명, 도체절단방법, 보관·운반·판매시 주의 사항 등 HACCP 관리기준서에 의해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미생물검사 기록을 최소한 2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또한, HACCP 적용작업장 지정 신청과 관련해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가 미비된 경우와 HACCP 적용작업장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역원장으로 하여금 15일 이내와 3개월 이내에 시정·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HC 항체 양성률 82.2%로 큰 폭 상승

지난 3월 19일 이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적인 돼지콜레라 백신접종 실시에 따라 돼지 콜레라 항체 양성률이 큰 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발표한 5월 비육돈에 대한 돼지플레라 항체검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 4.9% 까지 하락했던 항체 양성률이 2월 6.5%, 3월 26.4%, 4월 37.3%, 5월 82.2%로 큰 폭 상승했다.

익산 왕궁단지 돼지오제스키병 양성률 급감

142농가 7,645두 중 11농가 31두 양성 판명 전북 익산 왕궁 양돈단지의 돼지오제스키병에 대한 농가 및 돼지 양성률이 전년에 비해 큰 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정영채)는 “전북도본부가 지난 6월 16일부터 21일 까지 6일간 돼지오제스키병 상재지역인 익산 시 왕궁단지 142농가 7,645두에 대한 채혈검사를 실시한 결과, 11농가 31두(0.4%)가 양성으로 판정되어 전년에 비해 큰 폭 줄었다”고 밝혔다.

돼지 냉도체 육질등급판정 확대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정동홍)는 최근 영남산업이 돼지 냉도체 육질등급판정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돼지 냉도체 육질(물돼지)등급판정 시범사업을 9개소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등급판정소는 “지난해 4월부터 농협 김제육가공장 등 4개소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해 온 동 사업이 금년에는 한남 중부공장 등 4개소가 늘어나 모두 8개소에서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경남 창원군 소재 영남산업(대표 장환달)에서 신규로 참여함에 따라 모두 9개소에

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역본부, 6월 27일 특수법인 전환 출범

- 7월 1일 현판식 가져



(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가축전염병예방방법개정법률에 의거 6월 27일 특수법인으로 전환·출범하고 7월1일 오후 2시 방역본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거행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사단법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정영채 상임본부장)는 27일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설립 등기를 마치고, 지난 1일 김영진 농림부장관, 이우재 국회의원, 본회 김건태 회장 등 축산관련 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특수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설립 인가

농림부는 지난 12일 구 (사)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와 구 (사)한국축산환경협회를 통합한 사단법인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회장 정영채) 설립을 허가하고 공고했다. 양돈